

2017년 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7. 08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1
- 2. 주요 조사 내용 2
- 3. 응답자 특성 3

제2장 결과 요약

제3장 조사 결과

- 1. 국정운영 지지도 11
- 2.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12
- 3.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및 참모진 인선 평가 13
- 4.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초 14
- 5. 북미간 대립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15
- 6.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에 대한 평가 16
- 7.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 중단에 대한 평가 17
- 8. 공무원 추가 채용 방침에 대한 평가 18
- 9. 8.2 부동산 대책 효과 19
- 10. 8.2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추가 대책 20
-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필요 자원 마련 가능 여부 21
-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22
- 13. 정당지지도 23

부록 : 설문지

01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표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표본: 1,000명(조사완료 유효표본: 1,035명) - 유선전화 표본: 432명 - 휴대전화 표본: 603명
표본 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신뢰수준에서 ±3.0% point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유선전화RDD 및 이동전화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Dual Frame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Sampling)
조사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8월 14일(월) ~ 8월 15일(화)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칸타코리아 (구 미디어리서치)

2.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운영 지지도 ○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및 참모진 인선 평가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초 ○ 북미간 대립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에 대한 평가 ○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 중단에 대한 평가 ○ 공무원 추가 채용 방침에 대한 평가 ○ 8.2 부동산 대책 효과 ○ 8.2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추가 대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필요 자원 마련 가능 여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 정당지지도
인구통계학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 연령 · 지역 · 직업 · 학력 ○ 주관적 경제계층 · 이념성향 ○ 19대 대선 투표 후보

3. 응답자 특성

BASE:전체응답자		목표 사례수		조사 사례수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1,035)	100.0
☒ 성 별 ☒	남 자	(495)	49.5	(520)	50.2
	여 자	(505)	50.5	(515)	49.8
☒ 연 령 별 ☒	1 9 ~ 2 9 세	(179)	17.9	(157)	15.2
	3 0 대	(175)	17.5	(167)	16.1
	4 0 대	(205)	20.5	(217)	21.0
	5 0 대	(200)	20.0	(221)	21.4
☒ 권 역 별 ☒	6 0 세 이 상	(241)	24.1	(273)	26.4
	서 울	(195)	19.5	(198)	19.1
	인 천 / 경 기	(300)	30.0	(312)	30.1
	대 전 / 세 중 / 충 청	(105)	10.5	(111)	10.7
	광 주 / 전 남 / 전 북	(101)	10.1	(104)	10.0
☒ 직 업 별 ☒	대 구 / 경 북	(101)	10.1	(105)	10.1
	부 산 / 울 산 / 경 남	(156)	15.6	(161)	15.6
	강 원 / 제 주	(42)	4.2	(44)	4.3
	화 이 트 칼 라			(263)	25.4
	블 루 칼 라			(152)	14.7
	자 영 업			(171)	16.5
	가 정 주 부			(223)	21.5
☒ 귀 속 계 층 별 ☒	학 생			(87)	8.4
	농 / 임 / 어 업			(43)	4.2
	무 직 / 기 타			(93)	9.0
	모 름 / 무 응 답			(3)	0.3
	상 / 중 상 층			(141)	13.6
☒ 이 념 성 향 별 ☒	중 층			(386)	37.3
	중 하 층			(311)	30.0
	하 층			(181)	17.5
☒ 이 념 성 향 별 ☒	모 름 / 무 응 답			(16)	1.5
	보 수 도			(305)	29.5
	중 진 보			(185)	17.9
☒ 이 념 성 향 별 ☒	진 보			(419)	40.5
	모 름 / 무 응 답			(126)	12.2

02

결과 요약

1. 정치 및 인사 분야 평가

국정운영 지지도

매우 잘하고 있다	다소 잘하고 있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43.3	38.4	8.8	4.6	5.0
잘하고 있다 : 81.6		잘못하고 있다 : 13.4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중복응답)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및 참모진 인선 평가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	대체로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모름/무응답
18.9	57.4	13.8	5.1	4.8
잘했다 : 76.3		잘못했다 : 18.9		

2. 대북 외교 정책 분야 평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

강경한 대응 등 대북 압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상과 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압박과 대화가 병행 되어야 한다	모름/무응답
16.7	32.7	48.5	2.0

북미간 대립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매우 잘하고 있다	다소 잘하고 있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14.2	44.6	26.2	7.8	7.1
잘하고 있다 : 58.8		잘못하고 있다 : 34.0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에 대한 평가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	대체로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모름/무응답
24.4	47.4	17.5	3.3	7.5
잘했다 : 71.8		잘못했다 : 20.7		

3. 경제 및 사회 분야 평가

■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 중단에 대한 평가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모름/무응답
28.6	38.9	17.3	9.3	5.9
잘했다 : 67.6		잘못했다 : 26.5		

■ 공무원 추가 채용 방침에 대한 평가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21.3	36.2	24.3	15.9	2.3
찬성한다 : 57.5		반대한다 : 40.2		

■ 8.2 부동산 대책 효과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모름/무응답
16.2	47.7	26.5	3.0	6.5
효과가 있을 것이다 : 64.0		효과가 없을 것이다 : 29.5		

■ 8.2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추가 대책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모름/무응답
56.9	20.6	17.1	5.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필요 자원 마련 가능 여부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모름/무응답
50.2	43.7	6.1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60.6	34.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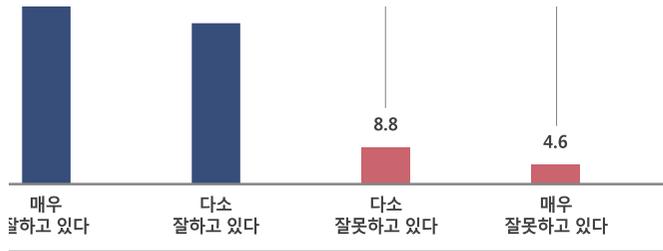
4. 정당 지지도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없다/모르겠다
56.8	7.9	4.7	7.0	5.9	17.9

03

조사 결과

1. 국정운영 지지도



○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1.6%)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 43.3% + 다소: 38.4%)고 평가함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4%(다소: 8.8% + 매우: 4.6%)였으며, '모름/무응답'은 5.0%였음

■ '긍정평가'는 40대 이하(19~29세: 87.0%, 30대: 91.0%, 40대: 88.1%), 광주/전라(94.3%), 화이트칼라(87.5%), 학생(85.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2%), 정의당 지지층(85.8%)에서 특히 높았으며,
'부정평가'는 60세 이상(22.9%), 대구/경북(26.9%), 농/임/어업(24.9%), 무직/기타(18.9%), 자유한국당 지지층(58.4%), 바른정당 지지층(2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전체		81.6	13.4	전체	81.6	13.4		
연령	19~29세	87.0	12.1	성별	남자	81.0	14.5	
	30대	91.0	5.5		여자	82.2	12.3	
	40대	88.1	8.1		지역	서울	83.9	11.5
	50대	73.2	15.5			인천/경기	81.2	14.4
	60세 이상	72.2	22.9			대전/세종/충청	81.1	11.5
더불어민주당	94.2	4.1	광주/전남/전북	94.3		2.1		
자유한국당	33.2	58.4	대구/경북	67.1	26.9			
지지 정당	국민의당	79.1	11.5	부산/울산/경남	82.0	13.4		
	바른정당	73.9	20.8	강원/제주	77.7	15.0		
	정의당	85.8	5.5					
	기타/없음/무응답	65.4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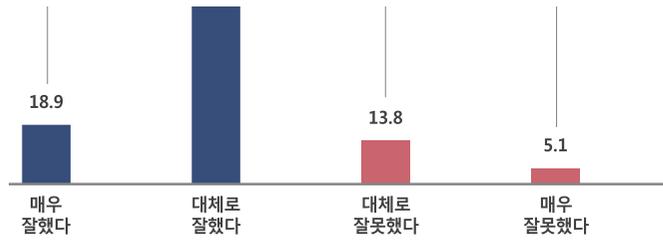
2.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은 결과(중복응답 기준) '일자리 확대 등 경제발전'이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았고,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해소'가 51.1%로 그 뒤를 이음
다음으로 '남북관계 개선'(30.3%), '사회갈등 해소'(19.5%),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19.3%), '개혁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16.7%) 등의 순이었음

■ '경제발전'은 대구/경북(67.1%), 부산/울산/경남(66.2%), 블루칼라(71.4%), 가정주부(62.3%), 농/임/어업(62.3%), 무직/기타(63.7%), 바른정당 지지층(62.1%)에서 특히 높았으며,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해소'는 30대 이하(19~29세: 62.1%, 30대: 64.3%), 서울(57.8%), 화이트칼라(55.5%), 블루칼라(55.1%), 학생(68.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7.6%), 정의당 지지층(58.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5.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중복응답 기준	중복응답 기준				중복응답 기준	중복응답 기준						
	일자리 확대 등 경제발전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해소	남북관계 개선	사회갈등 해소		일자리 확대 등 경제발전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해소	남북관계 개선	사회갈등 해소			
전체	59.0	51.1	30.3	19.5	전체	59.0	51.1	30.3	19.5			
연령	19~29세	61.1	62.1	20.3	24.9	성별	남자	52.1	53.9	32.4	20.3	
	30대	57.7	64.3	24.7	15.9		여자	65.7	48.4	28.3	18.7	
	40대	59.7	48.5	29.7	18.8		지역	서울	58.7	57.8	28.1	21.0
	50대	57.0	51.4	34.5	19.0			인천/경기	53.3	51.5	34.4	20.0
	60세 이상	59.5	35.5	38.9	19.3			대전/세종/충청	57.7	48.2	33.2	18.8
더불어민주당	59.6	57.6	26.8	17.7	광주/전남/전북	58.7		42.4	33.2	16.7		
자유한국당	48.2	19.8	45.3	29.0	대구/경북	67.1	43.6	33.0	16.9			
지지 정당	국민의당	56.3	46.6	38.5	17.1	부산/울산/경남	66.2	51.7	19.7	21.4		
	바른정당	62.1	49.8	30.4	22.8	강원/제주	58.8	61.4	30.9	16.8		
	정의당	50.2	58.3	29.7	14.1	국정운영 긍정평가	58.7	55.4	27.0	17.8		
	기타/없음/무응답	64.3	43.8	32.8	22.2	국정운영 부정평가	53.3	29.1	46.5	33.4		

3.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및 참모진 인선 평가



○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6.3%)이 '잘했다'(매우: 18.9% + 대체로: 57.4%)고 응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대체로: 13.8% + 매우: 5.1%)는 18.9%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및 참모진 인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긍정평가'는 40대 이하(19~29세: 83.5%, 30대: 86.2%, 40대: 83.9%), 광주/전라(93.2%), 화이트칼라(82.5%), 블루칼라(80.1%), 학생(79.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6%), 정의당 지지층(90.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5.7%)에서 높았으며, '부정평가'는 50대 이상(50대: 23.0%, 60세 이상: 30.4%), 대구/경북(22.1%), 부산/울산/경남(24.6%), 자영업(22.9%), 농/임/어업(25.6%), 무직/기타(24.8%), 자유한국당 지지층(68.8%), 국민의당 지지층(30.5%), 바른정당 지지층(36.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전체		76.3	18.9	전체		76.3	18.9
연령	19~29세	83.5	13.8	성별	남자	73.5	22.5
	30대	86.2	10.4		여자	79.0	15.5
	40대	83.9	13.3	지역	서울	75.8	20.3
	50대	71.3	23.0		인천/경기	77.2	17.8
	60세 이상	61.3	30.4		대전/세종/충청	72.4	20.8
정당	더불어민주당	90.6	6.6	지역	광주/전남/전북	93.2	4.9
	자유한국당	24.9	68.8		대구/경북	72.0	22.1
	국민의당	61.3	30.5	부산/울산/경남	69.7	24.6	
	바른정당	60.7	36.0	강원/제주	75.3	20.7	
	정의당	90.5	3.3	국정운영	긍정평가	85.7	10.6
	기타/없음/무응답	58.7	31.4		부정평가	27.5	67.4

4.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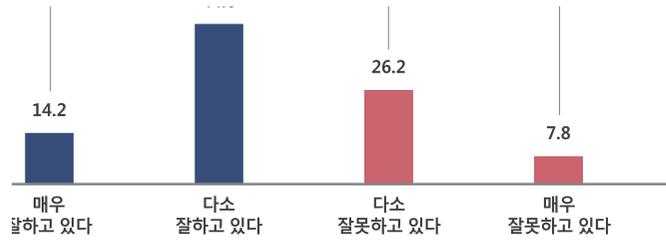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8.5%가 '압박과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협상과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32.7%), '강경한 대응 등 대북 압박이 우선되어야 한다'(16.7%) 순이었음

■ '압박과 대화가 병행'은 40대 이하(19~29세: 59.1%, 30대: 55.1%, 40대: 63.2%), 서울(56.1%), 화이트칼라(54.5%), 학생(61.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7%), 바른정당 지지층(52.6%), 정의당 지지층(58.2%)에서 높았고,

'협상과 대화 우선'은 50대 이상(50대: 38.5%, 60세 이상: 44.5%), 대전/세종/충청(38.5%), 광주/전라(41.7%), 블루칼라(37.7%), 가정주부(42.0%), 농/임/어업(4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7.0%), 국민의당 지지층(43.9%), 정의당 지지층(35.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강경한 대응 등 대북 압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상과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압박과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모름/무응답			강경한 대응 등 대북 압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상과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압박과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6.7	32.7	48.5	2.0	전체		16.7	32.7	48.5	2.0
연령	19~29세	22.1	18.7	59.1	0.0	성별	남자	22.2	24.9	50.8	2.1
	30대	15.2	28.5	55.1	1.2		여자	11.4	40.4	46.4	1.9
	40대	7.8	29.0	63.2	0.0	지역	서울	13.8	29.0	56.1	1.2
	50대	18.0	38.5	41.1	2.5		인천/경기	18.5	30.3	49.9	1.3
	60세 이상	20.4	44.5	29.7	5.4		대전/세종/충청	16.8	38.5	44.7	0.0
정당	더불어민주당	9.9	37.0	51.7	1.3	지역	광주/전남/전북	14.8	41.7	38.5	5.0
	자유한국당	47.9	20.3	30.5	1.3		대구/경북	19.7	35.5	39.4	5.4
	국민의당	27.8	43.9	26.0	2.4	부산/울산/경남	14.8	32.7	51.2	1.4	
	바른정당	27.3	20.1	52.6	0.0	강원/제주	23.2	25.1	49.7	2.0	
	정의당	6.1	35.7	58.2	0.0	국정운영	긍정평가	13.4	33.8	51.2	1.5
	기타/없음/무응답	21.1	25.5	47.5	5.9		부정평가	38.7	24.3	32.4	4.5

5. 북미간 대립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 최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인 58.8%가 '잘하고 있다'(매우: 14.2% + 다소: 44.6%)고 평가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0%(다소: 26.2% + 매우: 7.8%)로 나타나 북미간 대립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긍정평가'는 30대(65.2%), 40대(65.9%), 서울(62.6%), 광주/전라(66.7%), 화이트칼라(67.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3%), 정의당 지지층(66.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5.8%)에서 높았으며,

'부정평가'는 19~29세(43.8%), 60세 이상(37.4%), 대구/경북(42.0%), 자영업(38.1%), 학생(49.5%), 무직/기타(42.3%), 자유한국당 지지층(62.7%), 국민의당 지지층(47.2%), 바른정당 지지층(55.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3.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전체	58.8	34.0	전체	58.8	34.0
연령	19~29세	52.1	성별	남자	55.1
	30대	65.2		여자	62.5
	40대	65.9	지역	서울	62.6
	50대	59.7		인천/경기	57.0
	60세 이상	52.5		대전/세종/충청	56.4
	더불어민주당	72.3		광주/전남/전북	66.7
자유한국당	28.8	대구/경북	51.3		
지지 정당	국민의당	46.4	부산/울산/경남	57.6	
	바른정당	32.1	강원/제주	64.2	
	정의당	66.3	국정운영	65.8	
	기타/없음/무응답	40.5	운영 부정평가	22.5	

6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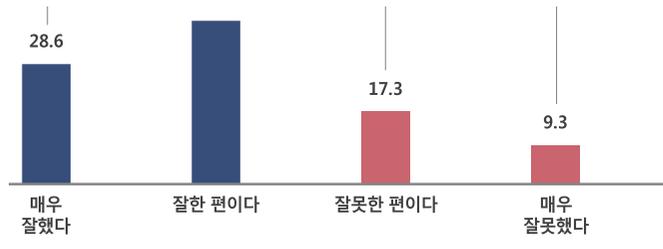
○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군의 사드 부지에 임시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71.8%(매우: 24.4% + 잘한 편: 47.4%)로 나타남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0.7%(잘못한 편: 17.5% + 매우: 3.3%)이었음

■ 전 계층에 걸쳐 '긍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80.8%), 부산/울산/경남(76.5%), 자영업(79.8%), 가정주부(76.2%), 농/임/어업(78.1%), 자유한국당 지지층(85.1%), 바른정당 지지층(80.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6.3%)에서 높았고,

'부정평가'는 40대 이하(19~29세: 25.3%, 30대: 24.5%, 40대: 24.3%), 서울(25.4%), 화이트칼라(24.7%), 블루칼라(24.8%), 학생(29.9%), 정의당 지지층(30.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전체	71.8	20.7	전체	71.8	20.7
연령	19~29세	68.5	성별	남자	74.5
	30대	72.0		여자	69.1
	40대	65.6	지역	서울	68.4
	50대	69.9		인천/경기	73.7
	60세 이상	80.8		대전/세종/충청	70.2
	더불어민주당	70.9		광주/전남/전북	68.8
자유한국당	85.1	대구/경북	68.1		
지지 정당	국민의당	73.7	부산/울산/경남	76.5	
	바른정당	80.4	강원/제주	75.8	
	정의당	60.1	국정운영	71.4	
	기타/없음/무응답	68.5	운영 부정평가	76.3	

7.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 중단에 대한 평가



○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67.6%(매우: 28.6% + 잘한 편: 38.9%)로 나타남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6.5%(잘못한 편: 17.3% + 매우: 9.3%)이었음

■ '긍정평가'는 40대 이하(19~29세: 77.8%, 30대: 81.2%, 40대: 74.4%), 인천/경기(70.9%), 광주/전라(75.0%), 블루칼라(71.0%), 학생(83.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8%), 정의당 지지층(74.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5.3%)에서 높았고,
'부정평가'는 50대 이상(50대: 35.1%, 60세 이상: 37.9%), 대구/경북(29.6%), 부산/울산/경남(30.3%), 자영업(35.6%), 농/임/어업(44.7%), 무직/기타(32.9%), 자유한국당 지지층(63.6%), 국민의당 지지층(44.5%), 바른정당 지지층(52.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7.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전체		67.6	26.5	전체		67.6	26.5
연령	19~29세	77.8	16.7	성별	남자	61.3	34.9
	30대	81.2	14.0		여자	73.7	18.4
	40대	74.4	24.1	지역	서울	67.6	27.5
	50대	59.0	35.1		인천/경기	70.9	24.6
	60세 이상	51.4	37.9		대전/세종/충청	64.1	28.4
	더불어민주당	80.8	15.2		광주/전남/전북	75.0	21.1
지지 정당	자유한국당	28.6	63.6	대구/경북	61.2	29.6	
	국민의당	53.0	44.5	부산/울산/경남	61.7	30.3	
	바른정당	45.4	52.6	강원/제주	71.5	23.0	
	정의당	74.1	21.9	국정 운영 긍정평가	75.3	19.4	
	기타/없음/무응답	53.0	32.9	국정 운영 부정평가	25.8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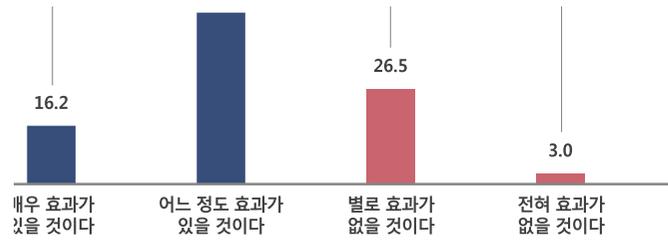
8. 공무원 추가 채용 방침에 대한 평가

○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인 57.5%가 '찬성한다'(매우: 21.3% + 대체로: 36.2%)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부정평가는 40.2%(대체로: 24.3% + 매우: 15.9%)로 나타나 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함

■ '찬성한다'는 30대 이하(19~29세: 71.5%, 30대: 61.9%), 서울(62.7%), 광주/전라(62.0%), 학생(72.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4%), 정의당 지지층(70.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3.5%)에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50대 이상(50대: 48.5%, 60세 이상: 45.2%), 대전/세종/충청(45.5%), 대구/경북(43.4%), 자영업(45.7%), 농/임/어업(47.5%), 자유한국당 지지층(74.7%), 국민의당 지지층(49.4%), 바른정당 지지층(56.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2.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체		57.5	40.2	전체		57.5	40.2
연령	19~29세	71.5	28.5	성별	남자	55.3	43.6
	30대	61.9	36.9		여자	59.7	36.9
	40대	58.6	39.2	지역	서울	62.7	36.9
	50대	49.5	48.5		인천/경기	56.2	41.4
	60세 이상	49.8	45.2		대전/세종/충청	51.0	45.5
	더불어민주당	67.4	30.7		광주/전남/전북	62.0	34.4
지지 정당	자유한국당	24.5	74.7	대구/경북	55.8	43.4	
	국민의당	47.9	49.4	부산/울산/경남	53.3	42.6	
	바른정당	42.6	56.0	강원/제주	68.5	31.5	
	정의당	70.3	28.6	국정 평가	63.5	34.3	
	기타/없음/무응답	44.8	50.5	국정 운영 부정평가	25.2	72.4	

9. 8.2 부동산 대책 효과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4.0%(매우: 16.2% + 어느 정도: 47.7%),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9.5%(별로: 26.5% + 전혀: 3.0%)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8.2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임
-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0대(76.4%), 화이트칼라(70.4%), 전세 거주층(68.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8.2%)에서 특히 높았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9~29세(36.5%), 50대(34.1%), 블루칼라(34.4%), 자영업(35.4%), 월세거주층(34.3%), 보유가구 2채 이상층(36.5%), 자유한국당 지지층(49.7%), 바른정당 지지층(44.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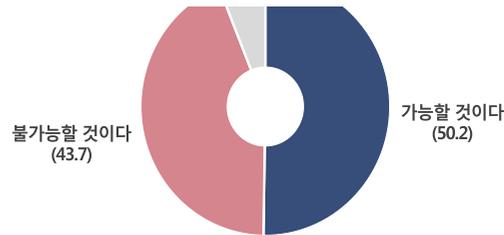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체		64.0	29.5	전체	64.0	29.5		
연령	19~29세	53.2	36.5	성별	남자	63.9	30.4	
	30대	65.5	28.8		여자	64.0	28.7	
	40대	76.4	22.1		지역	서울	66.3	31.6
	50대	62.9	34.1			인천/경기	66.9	29.6
	60세 이상	61.1	27.4			대전/세종/충청	55.7	34.7
더불어민주당	73.4	21.0	광주/전남/전북	65.9		25.0		
지지 정당	자유한국당	46.2	49.7	대구/경북	63.8	26.5		
	국민의당	63.3	34.1	부산/울산/경남	60.2	29.1		
	바른정당	52.2	44.0	강원/제주	62.4	26.5		
	정의당	67.8	27.7	국정운영	긍정평가	68.2	25.0	
	기타/없음/무응답	45.4	41.6	부정평가	46.0	51.5		
거주 형태	자가	65.1	28.6	보유 가구	없다	61.1	31.7	
	전세	68.0	25.7		1채	66.4	26.8	
	월세	57.6	34.3		2채 이상	60.8	36.5	
	반전세	63.8	29.7					

10. 8.2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추가 대책

-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추가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인 56.9%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꼽았음 그 다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20.6%), '분양가 상한제'(17.1%)의 순으로 나타남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30대(62.9%), 화이트칼라(62.0%), 자영업(60.5%), 대전/세종/충청(60.3%), 월세거주층(65.3%), 무주택가구(60.3%), 8.2 부동산대책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층(61.6%)에서 특히 높았고, '주택 공급 확대'는 서울(23.8%), 8.2 부동산대책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층(26.2%)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블루칼라(20.1%), 보유가구 2채 이상 가구(24.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전체		56.9	20.6	17.1	전체	56.9	20.6	17.1		
연령	19~29세	53.2	23.1	18.9	국정운영	긍정평가	57.8	20.7	17.0	
	30대	62.9	20.1	16.9		부정평가	52.6	22.3	17.0	
	40대	58.3	20.4	17.2		지역	서울	59.0	23.8	12.0
	50대	59.3	19.2	16.3			인천/경기	58.3	21.3	17.9
	60세 이상	52.1	20.4	16.3			대전/세종/충청	60.3	15.7	14.8
더불어민주당	60.0	18.7	16.6	광주/전남/전북	58.5		17.4	19.9		
지지 정당	자유한국당	45.6	23.8	21.0	대구/경북	53.1	20.1	18.9		
	국민의당	50.4	23.4	21.8	부산/울산/경남	52.5	21.7	19.2		
	바른정당	50.9	31.4	13.6	강원/제주	50.5	18.0	20.8		
	정의당	72.1	23.4	4.6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 것	61.6	18.2	16.0	
	기타/없음/무응답	51.0	19.5	20.9		효과 없을 것	49.4	26.2	19.2	
거주 형태	자가	55.4	20.1	18.5	보유 가구	없다	60.3	22.8	12.8	
	전세	59.2	21.1	14.7		1채	57.6	19.4	16.5	
	월세	65.3	21.5	12.5		2채 이상	50.4	22.9	24.4	
	반전세	58.9	18.8	15.7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필요 자원 마련 가능 여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자원 마련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50.2%, '불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43.7%로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30대(54.7%), 40대(55.9%), 인천/경기(53.4%), 광주/전라(56.8%), 블루칼라(60.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1.5%), 정의당 지지층(54.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6.2%)에서, '불가능할 것이다'는 19~29세(50.1%), 대구/경북(52.2%), 부산/울산/경남(53.1%), 자영업(48.0%), 학생(52.8%), 자유한국당 지지층(80.5%), 국민의당 지지층(61.1%), 바른정당 지지층(68.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6.9%)에서 특히 높았음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전체	50.2	43.7	전체	50.2	43.7
연령	19~29세	47.5	성별	남자	49.0
	30대	54.7		여자	51.5
	40대	55.9	지역	서울	51.2
	50대	48.7		인천/경기	53.4
	60세 이상	45.5		대전/세종/충청	50.4
	더불어민주당	61.5		광주/전남/전북	56.8
자유한국당	17.2	대구/경북	40.4		
지지 정당	국민의당	37.9	부산/울산/경남	42.5	
	바른정당	26.7	강원/제주	59.0	
	정의당	54.7	국정 긍정평가	56.2	
	기타/없음/무응답	39.8	국정 부정평가	19.1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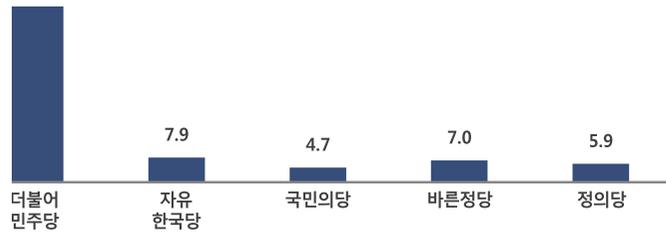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목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0.6%, '반대한다'는 응답이 34.0%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찬성한다'는 의견은 30대 이하(19~29세: 70.5%, 30대: 74.2%), 광주/전라(68.9%), 부산/울산/경남(63.5%), 화이트칼라(69.7%), 블루칼라(65.2%), 학생(71.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4%), 정의당 지지층(73.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7.5%)에서 특히 높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50대: 39.1%, 60세 이상: 45.1%), 대전/세종/충청(48.5%), 대구/경북(38.9%), 자영업(44.8%), 가정주부(39.4%), 농/임/어업(39.2%), 자유한국당 지지층(70.1%), 국민의당 지지층(47.8%), 바른정당 지지층(54.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체	60.6	34.0	전체	60.6	34.0
연령	19~29세	70.5	성별	남자	60.4
	30대	74.2		여자	60.8
	40대	62.9	지역	서울	61.1
	50대	56.5		인천/경기	63.0
	60세 이상	44.8		대전/세종/충청	45.2
	더불어민주당	72.4		광주/전남/전북	68.9
자유한국당	21.2	대구/경북	57.8		
지지 정당	국민의당	44.7	부산/울산/경남	63.5	
	바른정당	43.2	강원/제주	54.9	
	정의당	73.1	국정 긍정평가	67.5	
	기타/없음/무응답	47.4	국정 부정평가	22.8	
			운영		

13. 정당지지도



○ 현재 지지하고 있거나 호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묻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56.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음
 그 다음으로, 자유한국당(7.9%), 바른정당(7.0%), 정의당(5.9%), 국민의당(4.7%)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은 17.9%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40대 이하(19~29세: 60.9%, 30대: 63.5%, 40대: 63.8%), 광주/전라(74.1%), 화이트칼라(62.4%), 블루칼라(6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5.5%)에서 특히 높았으며, '자유한국당'은 60세 이상(18.9%), 대구/경북(18.5%), 부산/울산/경남(11.1%), 가정주부(13.4%), 농/임/어업(15.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4.3%)에서, '바른정당'은 대구/경북(11.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1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전체		56.8	7.9	4.7	7.0	5.9	전체		56.8	7.9	4.7	7.0	5.9
연령	19~29세	60.9	2.5	5.1	5.5	5.3	성별	남자	55.4	7.6	5.3	9.0	5.8
	30대	63.5	1.7	4.4	9.8	7.8		여자	58.1	8.1	4.0	5.0	5.9
	40대	63.8	3.8	3.5	6.1	7.9	지역	서울	55.5	4.9	7.6	7.3	7.7
	50대	50.5	9.1	5.4	8.2	9.7		인천/경기	60.4	6.8	3.0	6.1	6.0
	60세 이상	48.1	18.9	5.0	5.6	0.0		대전/세종/충청	49.8	8.2	6.9	8.7	7.8
더불어민주당		100.0	0.0	0.0	0.0	0.0		광주/전남/전북	74.1	0.0	9.3	2.5	4.8
지지 정당	자유한국당	0.0	100.0	0.0	0.0	0.0	대구/경북	39.6	18.5	2.9	11.0	4.1	
	국민의당	0.0	0.0	100.0	0.0	0.0	부산/울산/경남	54.6	11.1	1.5	9.2	5.5	
	바른정당	0.0	0.0	0.0	100.0	0.0	강원/제주	61.6	9.9	1.6	0.0	0.0	
	정의당	0.0	0.0	0.0	0.0	100.0	국정 운영	긍정평가	65.5	3.2	4.5	6.3	6.2
	기타/없음/무응답	0.0	0.0	0.0	0.0	0.0		부정평가	17.4	34.3	4.0	10.8	2.4